



민주노총 98년 고용안정 및 임금·단협 방침

김태현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추진위원장



1. 현재의 상황

IMF 구제금융을 받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 한국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 통계로도 130만 명이 넘는 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으며, 물가는 폭등하고 산업현장은 대량 정리해고, 배치전환, 임금 삭감 및 체불, 용역강제를 동원한 노조 탄압으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분노와 투쟁 결의로 가득 차 있다. 이번 제 108주년 세계노동절대

회에서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제히 가두로 몰려와 도심지 일대를 몇 시간 동안 마비시키고 격렬한 투쟁을 전개한 것은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정부는 형식적인 실업대책만 내세우며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 오히려 공무원 임금 10% 일방적 감축,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의 화상만 강요하고 있으며, 현 경제파탄의 주범인 재벌개혁이나 정치권의 고통분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경

제정책이 경제신탁통치라고 표현되듯이 자주적인 경제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IMF에 종속되어 일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IMF는 국제 투기자본의 요구에 따라 국가 부도 위기에서 빛을 빌려주되, 철저히 이자를 갚도록 요구하고 고이자 재정긴축 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무의부 번역된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규모 설업과 물가폭등으로 노동자와 민중 생존권을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특히 IMF는 이번 기회에 자본시장 개방을 일거에 이루어내고 국가경제를 외국 자본가의 손에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

일부 운동권에서는 마치 IMF가 재벌체제를 개혁하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독점자본 전체의 호흡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IMF의 재벌개혁 요구는 국제 수준에 비추어 재벌들이 가지는 천민성과 족벌성을 개혁하자는 것이지 절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정세에서 오히려 재벌이 '현대화' 된 형태로 재생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재벌개혁을 보다 철저히 요구하여 재벌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투쟁해야 하며, 아울러 현재의 경제파탄을 가져온 국제독점자본의 투기성과 반 노동자성을 주목하고 이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김대중 정권은 IMF를 비롯한 국제부기

자본의 요구와 더불어 공동정권이라는 미명으로 보수원류를 자처하는 김종필의 자민련과 연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민주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 정세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점때문에 김대중정권에 어떠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비롯한 민주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어 대중투쟁을 통해 개혁을 강제해 나가야 한다.

2.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

민주노총의 당면 시기 주요 요구는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사회개혁이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2)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3) 일방적 구조조정 중지와 산업별 고용안정협정 체결 4) 정리해고·파견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정부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주요 산업에서는 주 35시간제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2,400시간이 넘기 때문에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면 20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분에 대해서는 고용세 도입으로 보전하는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1) 고용세를 도입하고 무기수입 중단을 통한 국방비 감축으로 20조원 이상의 실업기금을 마련하

여 획기적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2)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3) 대규모 공공투자 등으로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1) 경제파탄을 일으킨 주범을 구속·수사하고 2) 재벌체제 해체, 재벌총수 재산 환수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이루어내어야 하며 3) 4대 사회보험을 통합 일원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기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4) 세제개혁과 물가안정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국민생활안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민주노총의 임금인상 요구는 다음과 같다. ▲물가상승률 5%내 억제 ▲현 수준의 고용 유지 등 고용안정협약 체결 및 고용안정기금 적립, 경영참가 보장 등을 전제로 1998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5.1~9.2%로 제시한다. 단, 저임금 사업장의 경우 초과하여 제기할 수 있게 여지를 두고 있다. 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5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98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전산업 정액급여 평균의 40%인 404,941원으로 한다(전산업 정액급여 평균(97년) 1,012,352원 × 0.4 = 404,941원).

이율러 민주노총 산하 각 단위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갱신의 핵심을 고용안정 협정 체결에 두고, 1) 노사 동수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고용안정기금 적립 및 노조 관리 2) 노사 합의 없는 정리해고 및 감원·

임시직, 파견근로 사용 금지 3)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4) 노조와의 합의 없는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 금지 5) 노조의 사외이사 감사 참여 등 경영참가 보장 6) 산업안전 활동보장 등을 주요 요구로 반드시 제기하도록 지침을 제시하였다.

3. 민주노총의 투쟁기조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민주노총은 5월말과 6월초에 투쟁을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5월1일 세계노동절 전국중앙집중대회를 거쳐 5월 16일 전국동시다발집회, 23일 공공부문·자동차 등 부문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5월말과 6월초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투쟁의 주요 동력은 고용불안에 쌓여있는 자동차산업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대량감원의 위기에 쌓여있는 공공부문의 노동자이다. 이미 자동차산업은 모든 완성차 회사가 30%이상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금속산업연맹에서는 주 38시간 노동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관통폐합, 민영화 및 분할 매각, 임금감축에 반대하는 투쟁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고용안정 협정 체결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노·정·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부문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올바로 보장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산업 노동자들은 이미 5월 20일~25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말과 6월초의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금 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이 불법 정리해고, 임금삭감, 용역깡패 동원 같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동조합을 괴괴하려는 공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노사정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약속하고 노동부장관도 누누이 이를 강조하고 있으나, 명동성당에서 한 달 넘게 텐트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고 정부로부터는 '입건하겠다'는 말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고 수요집회를 계속 추진하여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규탄작업은 물론 직접 타격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내수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호성 실업자구제정책 밖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실업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본적 실업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조직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을 제1동력으로, 실업자와 미 조직 노동자를 제2동력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중단체를 범국민적으로 결집하여 범국민적 대책위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러한 각 조직의 투쟁과 사안별 투쟁을 결합하여 전국 전선을 형성하고 대정부 직접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각각의 투쟁이 각각 약진할 경우 민주노총 차원의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흐트러지고 만다).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척결,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철폐가 전제되고 대통령자문기구가 아닌 대등한 노사교섭 틀로 승격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바탕으로 대정부 직접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또한 민주노총은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투쟁체계를 정비하였다. 투쟁본부는 산하에 「고용안정 및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공투위」, 「실업대책본부」를 두고 중앙집행부를 집행단위로 하고, 사무처 모든 성원을 정체기획반 교육선전반 대외협력반으로 하여 사무총장 관할 하에 총력투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4. 맷음말

이미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 결의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의 격렬한 가두투쟁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5월말~6월초의 총력투쟁 시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강력하게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전선 형성을 시기분산과 조직 분열을 통해 와해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모든 조직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탄압과 회유를 병행할 것이다. 이미 지난 노동절 투쟁 직후 청와대는 불법노동운동에 대한 엄단과 획기적 실업대책 마련이라는 이중 대책을 내놓았다. 재벌과 보수관료들은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요구할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면서 분명한 대안과 방침을 가지고 조직하고, 아울러 실업자와 각계각층을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도록 해야 한다. 투쟁과 교섭, 요구의 분명한 정식화, 지도부와 현장의 결합 등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치밀한 역량의 배치와 폭넓은 연대가 요구된다.

지난 노동법개정투쟁 총파업에서처럼 다시 한번 한국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모범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난 노사정위원회 협상에서처럼 좌우로 혼들리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것인가는 민주노총의 모든 지도부와 기간 활동가, 조합원에게 달려있다. ♦